

환동해 지역 생태협력의 실제와 생태공동체 형성 방안*

이 선 이

경희대 한국어학과

< 목 차 >

- | | |
|-------------------------------------|------------------------|
| I. 들어가며 | 3. 환동해 지역의 생태공동체 형성 방안 |
| II. 환동해 지역 생태협력의 실제와 생태공동체
형성 방안 | III. 나오며 |
| 1. 환동해 지역 생태협력의 실제 | 참고문헌 |
| 2. 기존 생태담론의 환동해 지역 적용가능성과
그 한계 | Abstract |

Key words(중심용어): 동해(The East Sea), 환동해 지역(The East Sea Rim), 생태담론(Ecological discourses), 생물지역적 서사(Bioregional narrative), 초국가적 연대(Trans-critic solidarity)

국 문 요 약

본고는 환동해 지역의 지역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태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살펴보았다. 첫째, 현재 환동해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태협력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둘째, 기존의 생태담론을 검토하고 이들 담론을 환동해 지역에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환동해 지역의 생태공동체 형성을 위한 연대의 내면화와 실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 논의를 통해 환동해 지역의 생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민족, 자본의 분할선을 넘어설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여기에서는 지역의 생태적 고유성을 내면화하면서 동시에 초국가적 연대 방식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인 생태공동체 형성 방안으로는 생물지역적 서사를 통한 연대의 내면화와 소비자로서의 노동자 의식을 통한 초국가적 연대의 실천을 제시하였다.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9 -362-A00011)

I. 들어가며

환동해 지역은 동해라는 해양공간을 에두르는 원환모양을 하고 있다. 한반도 동해안, 중국의 동북 3성, 일본의 서해안, 러시아 극동지역에 해당하는 이 지역은, 동해라는 독특한 폐쇄 해역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륙공간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동해라는 해양공간의 공유는 이 지역의 지역질서를 구획 짓는 정치경제적 제도와 역사를 되돌아 볼 때, 지역적 공감대나 공동체 정서를 형성하는 데에는 그리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역내에 있는 지역민들은 상이한 국가, 민족, 문화, 언어, 체제 등으로 인해 하나의 지역적 공동체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진행된 세계화 체제의 다기한 현상은 전통적인 국가, 민족, 자본이 구축한 현실지형을 바꾸어 놓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지구지역화(globalization)의 부상은 이 지역에 가장 먼저 경제적인 교류를 촉발하게 되면서 환동해의 독립적인 공간화 내지는 지역화를 촉발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강고하게 실재하는 포스트냉전체제나 민족주의 등의 갈등과 대립은 환동해 지역의 지역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환동해 지역의 지역화를 위해 이 지역의 공통 관심사에 근거한 보다 다른 차원의 지역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모색을 위해 우리는 생태공간으로서의 동해를 환동해 지역연구에서 연대의 교량으로 의미 있게 해석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연, 인간, 삶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천착을 보이는 생태적 인식은 동해를 교량으로 삼아 환동해 지역을 하나의 생태공간으로 재인식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발주의와 성장주의에 몰두해 온 근대담론에 대한 대항담론으로 생태담론은 지난 수 년 동안 국가와 민족을 초월한 연대를 실천하게 하며 새로운 협력과 공동체意識의 형성을 자극해 왔다. 환동해 지역에서도 생태적 인식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제도화 되고 이것이 역내 국가들의 행위를 규율하는 실제적인 힘을 가지게 되면서, 생태공간으로서의 동해에 대한 자각은 공통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폐쇄해역으로서의 동해에 대한 관심이 지역민들의 삶에 대한 관계성을 자각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실증한다. 즉 생태공동체로서의 지역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지역성 형성을 견인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환동해 지역의 생태적 협력이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태공동체의 형성 방안에 대한 면밀한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역연구의 본질은 지역성을 성립시키는 고유한 논리를 분명히 하고 세계적인 시야로 그 지역성·고유성을 일반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데 있다.’¹⁾는 야노 토루의 지적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전통적 공동체라 할지라도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면 이러한 공동체意識은 와해될 수 있고 인위적 공동체라 하더라도 구성원의 동류意識과 공속감을 발견하는 방식에 따라 집단의 존재성은 다른 국민들에서 연대의 감각을 고도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정치경제적 필요가 강제하는 기계적 연대가 아니라 자각과 성찰에 의한 자발적이고 유기적인 연대의

1) 야노 토루 편(1997), 『지역연구의 방법』, 아시아지역경제연구회 역, 전예원, p. 10.

가능성을 제고하여 새로운 지역성의 함의를 발견하고 찾아나가는 작업이 환동해 지역의 지역성을 형성하는 새로운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연구란 표면적으로는 특정 지역에 대한 고유성들을 발굴하고 이를 종합하는 지적 실천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특정 지역을 매개로 기존 세계인식의 방법과 실재를 재성찰하는 인식론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마루카와 데쓰시가 국민국가의 규정과 한계를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세계인식이 어떻게 성립했는지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며 '리저널리즘(regionalism)'을 강조하듯이²⁾, 환동해 지역의 지역화 과정은 새로운 지역인식의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국가, 민족, 자본이 구획한 근대적 분할선과 표상체계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지중해라는 공간이 불러일으키는 강렬한 햇살과 푸른 바다의 이미지는 근대 작가들의 예술작품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이처럼 우리의 집단적 기억은 언제나 특정시기에 새롭게 형성되고 발견된다는 점에서 동해를 둘러싸고 있는 환동해 지역 또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 재발견될 수 있는 공간이다. 새로운 정체성은 사람들 사이에 반복적으로 공유되는 의미에서 창출된다는 사실³⁾ 전제하면, 새로운 지역정체성이란 결국 새로운 의미권을 만드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환동해 지역의 생태공동체 형성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동해 지역의 생태협력과 생태인식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한다. 둘째, 기존의 생태담론을 검토하고 이를 환동해 지역에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환동해 지역의 생태공동체 형성 방안을 인식과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환동해 지역 생태협력의 실제와 생태공동체 형성 방안

1. 환동해 지역 생태협력의 실제

환동해 지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생태적 협력은 환경보존 차원을 위한 국가 간 협력 및 이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들 국가 간 협력은 대체로 국제기구가 주도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프로젝트의 결과로 볼 수 있지만,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생태에 대한 관심의 고조도 눈여겨 볼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개별 국가 간 협력의 경우, 훨씬 다양한 양상을 보이지만 여기에서는 환동해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생태협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북서태평양환경보전실천계획(NOWPAP)'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

2) 마루카와 데쓰시(2008), 『리저널리즘』, 백지운·윤여일 역, 그린비, p. 18.

3) 민병원(2008), "동아시아 지식질서와 문화 네트워크의 모색," 김상배 외, 『지식질서와 동아시아』, 한울아카데미, p. 394.

합(NEAR)’의 ‘환경분과위원회’ 활동을 꼽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동해에 대한 생태적 재인식을 통해 동해 연안 국가의 생태협력을 이끌고자 일본 도야마현(富山縣)이 주도하고 있는 ‘일본해학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NOWPAP’, ‘NEAR’의 환경분과 활동, ‘일본해학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 지역의 생태협력의 실제적인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우선, 환동해 지역에서 현재 진행 중인 생태협력 가운데, 제도화 과정을 거치면서 현실화된 협력으로는 ‘북서태평양환경보전실천계획<NOWPAP>’의 활동을 꼽을 수 있다.⁴⁾ ‘북서태평양환경보전실천계획’은 유엔환경계획(UNEP)이 수행하고 있는 지역해 관리 프로그램(Regional Seas Programme)의 일환으로 1994년에 시작되었다.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사무국이 한국의 부산과 일본의 도야마에 설치되고, 북한을 제외한 한·중·일·러에 지역실행센터가 국가 별로 설치되면서 국가 간 생태협력은 활발하게 수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각국에 지역실행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해양조사의 정보를 공유하고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⁵⁾

이 경우, 역대 5개국(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이 1991년 5월 UNEP 제16차 집행이사회 기간 중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국가주도의 생태협력 사업으로 규정할 수 있다. 1994년 제1차 정부 간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계획을 채택함으로써 사업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이는 국제기구가 지역해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지침서로 삼아 지역 내 정부 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대표적인 생태협력 사례로 볼 수 있다.

<표 1>

NOWPAP 지역실행센터(RAC)	주요 사업
MERRAC(한국, 대전) Marine Environmental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Regional Activity Centre	- 유류유출 등의 해양오염 조사 및 대응방안
CRARAC(일본, 도야마) (Special Monitoring and Coastal Environment Assessment Regional Activity Centre)	- 유해적조 등의 해양환경의 모니터링 및 평가
DINRAC(중국, 북경) (Data and Information Network Regional Activity Centre)	- 역내 생태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관리 및 환경 관련 정보관리
POMRAC(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Pollution Monitoring Regional Activity Centre)	- 대기오염원의 해양 및 연안환경 유입 등의 모니터링

- 자료 출처 : 북서태평양환경보전실천계획의 홈페이지 참조(<http://www.nowpap.org/>), 2011년 2월 18일

4) 이 활동에 대해서는 유넵(UNEP)에서 발간한 “해양보호지역의 국가 및 지역의 네트워크 보고서”를 참고 하였음. (National and Regional Networks of Marine Protected Areas : A Review of Progress : http://www.unep-wcmc.org/resources/publications/UNEP_WCMC_bio_series/3), 2010년 10월 10일 검색.

5) 남정호(2004), “NOWPAP 해양환경보전 활동에서 우리나라의 주도적 위치 확보 필요,” 『해양수산동향』, 제1165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 1.

검색.

또한, 환동해 지역의 생태협력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대표적인 예로 ‘동북아시아지방 자치단체연합(NEAR)’의 하위 분과 중 하나인 ‘환경분과위원회’의 활동을 꼽을 수 있다. 이 단체의 회원은 현재 6개국 68개의 지방단체가 참가하고 있어 환동해 지역보다는 훨씬 넓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단체의 ‘환경분과위원회’는 일본의 도야마현이 주도하면서 바다와 육지를 공유하고 있는 지역의 지리적 특징을 충분히 고려한 환경문제를 이슈화하고, 이를 상호공유하면서 생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⁶⁾ 특히 지역 내 다른 국가에 비해 산업화를 앞서 경험한 일본이 후발산업화 국가인 중국이나 러시아에 이러한 경험을 제공하고 환경문제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어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 인구밀집도가 높고 산업화가 진행 중인 환동해 지역의 환경문제를 지역의 공유문제로 상정하고 이를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한 이러한 노력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큰 이슈 중심의 생태문제에서 벗어나 작지만 지역민의 삶으로부터 도출된 환경문제에 주목하고 있어 지역 밀착형 생태협력이라는 의미 있는 실천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이 단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일본의 경우, 지역의 주요 환경문제인 황사문제, 주변 해역의 오염문제 등에 집중되고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의 경우, 일반적인 생태인식의 제고 차원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일본이 환경보존과 관리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 환경인식의 제고와 친환경적인 산업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발전의 정도에 따른 국가별 환경인식이 뚜렷하게 나누어지는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단체에서 진행 중인 역내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사업은 <표-2>와 같다.

<표 2>

	프로젝트명 (제안 자치단체)	사업 개요
1	황사를 대상으로 한 광역적 모니터링 체제 구축 (일본/도야마현)	국내외의 경제계·학계 자치단체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간이 모니터링 (시정조사)을 계속해서 실시함으로써 황 사의 실태나 영향을 광역적으로 파악하는 것 등을 목적 으로 한 프로젝트 황사가 날아오는 시기인 매년 3월~5월에 조사 실시
2	동북아시아지역 환경체험프 로그램 (중국/요녕성, 일본/도야마 현)	자치단체 · 경제계 · 학계가 연계해서 청소년들에게 동 북아시아 지역의 환경문제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 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 프로젝트
3	동해·황해연안의 해변 표찰	①인공물에 의한 해변의 오염실태를 계속적으로 파악함

6)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2009), 『NEAR 백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 pp. 210-220. 참조.

	물조사 (일본/도야마현)	으로서 해양환경 보전대책 등의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②연안 지역주민의 조사 참가를 통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마음, 바다의 환경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기른다」 라는 공통의식을 양성하고 환경교육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
4	제4회 국제환경포럼 「국경 없는 자연」 (중국/연해주)	전체회의 테마에 어울리는 워크숍, 원탁회의, 특별전시 등을 실시하고 각 분야의 현상과 과제, 향후의 전망 등에 대한 토론을 통해 환경정책의 개선과 보다 나은 환경창출, 천연자원의 복합적 이용·고도가공 등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

- 자료 출처 : 2009년 제9회 NEAR 환경분과위원회 자료집(http://www.npec.or.jp/northeast_asia/korea2/introduction/pdf/041.pdf), 2011년 2월 25일 검색.

일본은 환동해 지역 내 국가 가운데 생태에 대한 인식과 국제적 협력을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1997년 '환일본해환경협력센터(NPEC : North west Pacific Region Environmental Cooperation Center)'를 도야마현에 개설하고 일본은 정부차원에서 지역 내 각국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 기관은 북서태평양환경보전실천계획'을 포함하여 각종 환경교류사업, 환경조사사업, 환경보존시책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연구, 교육, 국제교류를 종합적으로 이끌고 있어 환동해 지역의 생태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이 기관에서는 동북아시아 청소년들의 환경인식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각국의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동북아시아 청소년 환경보존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생태현장을 직접 관찰하고 체험하며 자신이 살고 있는 생활지역의 문제점들을 환동해 지역 전체를 두고 사유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교류협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환경보존 사업은 <표-3>과 같다.

<표 3>

	프로젝트명	사업 개요
1	동북아시아 지역환경 체험 프로그램	지자체·경제계·학계가 연계해서 청소년들에게 동북아시아 지역의 환경 현상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상의 인식을 높임과 동시에 국제환경 협력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동북아시아 청소년 환경보존 레포트	이 사업은 NEAR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학교나 지역에서 대중적인 환경 보전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국제적인 환경 교육의 장을

		<p>제공함으로써, 지역과의 유대관계를 갖고, 넓은 시야로 환경 보전에 임하는 인재를 육성해 동북 아시아 지역의 환경 보전을 추진하는 사업</p>
3	<p>동북아시아 청소년 환경보존 리더 회의</p>	<p>동북아시아 미래의 환경보전을 담당할 리더인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5개국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동해를 중심으로 한 환경학습을 실시하여 해양문제에 관한 리더로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동북아시아 전체의 해양환경 보전의식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p>

- 자료 출처 : 북동아시아청소년환경보존네트워크(http://www.npec.or.jp/northeast_asia/youth/index.html), 2011년 2월 20일 검색.

이상으로 환동해 지역에서 실천되고 있는 생태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 지역에서 실재하고 있는 국제기구, 국가/지방 차원의 교류는 아직 그 역사가 짧을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정보교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발적인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지역생태를 위한 연대는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이 지역의 강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 등이 현실적 장벽으로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생태적 인식에 적극적인 일본과 아직 개발과 발전에 더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보이는 생태인식의 격차는 협력에서 더 나아가 생태적 연대를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 폐쇄적인 국가체제뿐만 아니라 빈곤문제 등이 실재하고 있어 생태적 인식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는 아직 갈 길이 소원해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환동해 지역의 생태협력은 점점 증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이들 교류는 생태공동체로서의 환동해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함으로써 확대되고 구체화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지역에 대한 생태인식의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동해라는 공간에 주목하고 있는 일본의 ‘일본해학추진위원회’의 구상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환동해 지역을 의미하는 생태공간으로 인식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구상이자 실천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일본해학추진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일본해학’의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순환을 중심에 둔 사고이다. 이는 환동해 지역의 주기성을 가진 지구전체의 자연환경 시스템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이 지역의 순환시스템을 지구전체의 순환시스템과 연관시켜 사고해 나가자 한다. 둘째, 공생을 중심에 둔 사고이다. 이는 환동해 지역에 있어서 인간과 자연, 동해를 공유하는 지역민 간의 인간과 인간의 공생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셋째, 동해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을 중심에 둔 관점이다. 환동해 지역의 삶에 있어서 바다로서 동해가 갖는 역할을 다시 묻고, 동해가 갖고 있는 특성을 다각도로 규명해 보자는 입장이다. 이는 기존의 지역연구가 대륙 중심의 관점이라는 점에서 바다로의 관점 전환을 의미한다. 대륙 중심의 지역연구가 주로 정치, 경제, 사회사를 중심에 두고 있다면 ‘바다의 시점’은 해양학, 기상학, 생태학, 문명교류

사 등이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근대의 발전론적 문명관에서 벗어나 탈근대의 상생적 공존을 모색한다는 입장에서 이 지역을 지구적 차원에서 바라보자는 것이 ‘일본해학’의 기본 입장이다.⁷⁾

이 논의에서 ‘순환’이 ‘일본해학’이 지향하는 대전제라면 ‘공생’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지역민의 연대를 의미하며, 이를 위해 동해라는 해양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해양을 개발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즉 일본의 일본해학은 생태계가 보여주는 상호연관성을 순환으로 보고 공생이라는 공동체적 인식에 기반하여 환동해 지역화를 도모하자는 선언적 취지가 담겨 있다.⁸⁾ 문제는 순환과 공생과 동해가 내밀하게 연관되면서 어떻게 환동해의 지역성을 만들어나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또한 일본의 일본해학을 면면히 따라가다 보면 그 논리적 귀결이 섬나라라는 인식에서 해양국가라는 인식으로의 ‘공간인식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즉 환동해 지역의 상호연관성에 천착하기보다는 자국 내의 인식전환에 주안점을 두는 담론의 실천에 대해서는, 비록 지나간 근대사의 역사적 상처가 불러일으키는 환상통이라 하더라도, 비판의 주파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이러한 면에서는 유사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 반도에 위치하고 있지만 북한과의 폐쇄성으로 인해 섬과 같은 입장에 처해 있고 따라서 해양에 대한 관심은 점차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 내지는 태도 변화는, 개방화 이후 해양국가로서의 위상을 강조하면서 해양국토를 넓히려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견제라는 전략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한·중·일의 해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수록 해양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국경경비가 강화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민의 삶을 중심에 둔 생태공동체의 형성을 통해 갈등을 연대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환동해 지역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생태협력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현재로서는 이 지역의 생태협력은 국가 간의 환경정보를 공유하는 차원과 환경보존을 이유로 국가 간 혹은 지방 간 교류를 지속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렇다면 환동해 지역에서 생태적 인식을 통한 지역화를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가 간 생태 인식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은 보다 본질적인 면에서 국가주의와 자본주의에 나포된 인식 때문에 생긴 결과이기도 하다. 국가, 민족, 자본의 위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생태적 인식도 결국 국가주의와 자본주의로 환원되어 버리는 형국이라 하겠다. 따라서

7) 일본해학은 기본 관점은 ‘순환’, ‘공생’, ‘일본해’를 중심에 둔 인식으로, 주요 연구 분야는 환일본해의 자연환경, 환일본해 지역의 교류, 환일본해의 문화, 환일본해의 위기와 공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환일본해의 위기와 공생은 폐쇄해역으로서의 일본해의 환경보존을 위한 대책과 국제협력, 미래의 환일본해 지역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인간과 자연과의 공생, 환일본해 지역의 공생을 제시하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다.(富山縣 國際·日本海政策課(2008), “日本海學の提唱と歩み,” 日本海學推進機構編, 『日本海學の新世紀·8』, pp. 10-12.)

8) 일본에서 설정하고 있는 환일본해 지역은 동해를 공통 내해(內海)로 공유하는 일본, 중국, 한국, 러시아, 북한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지역을 말하지만, 구체적인 지리적 범위에 대해서는 유엔환경계획(UNEP)이 나온 북서태평양지역해협동계획(NOWPAP)의 지리적 범위를 근거로 하여 동해와 황해 및 그 주변 지역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북동아시아 환경정보광장:http://www.npec.or.jp/northeast_asia/social/index.html, 2011년 2월 19일 검색)

이를 넘어설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기존 생태담론의 환동해 지역 적용가능성과 그 한계

생태에 대한 학문적 인식은 자연과학에서 출발하여 사회과학 분야로 전이되었다. 생태학이라는 용어는 1866년에 독일의 동물학자 헤켈(Haeckel)이 사용하면서 외부 학계에 널리 알려졌으며 다양한 생태담론으로 분화되면서 타학문으로 확산되었다.⁹⁾ 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과학 내부에서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산업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야기한 환경위기로 인해 생태학은 중요한 사회담론으로 인식되었고 점차 산업자본주의에 대한 대항담론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다지고 있다.

자연과학계에서 생태학은 하나의 개체나 군집 단위의 생물체와 환경 간의 상호관련성에 주목하는 경향을 의미하지만, 이 용어는 점차 지구적 차원이나 우주적 차원에서 생물체와 환경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거시적인 관점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과학계에서 이 용어를 적극적으로 차용하면서, 생태적 인식이란 자연과 인간을 유기체로 파악하는 일련의 경향이나 인간, 사회, 자연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려는 시각을 의미하게 되었다. 오늘날에 이르러 생태학은 탈근대 사회의 주요 담론으로 주목받으며 환경담론, 녹색담론, 녹색정치, 생태정치, 생태주의, 생태여성주의, 생물지역주의 등의 용어로 수사적 변이와 의미의 변용 및 확장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생태적 인식이 정치경제학과 만나 지구환경레짐, 지구환경정치학, 지구정치, 환경정의 등으로 관점이나 논점을 변용하면서 사회과학적 입지를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¹⁰⁾

이러한 담론들의 출발선상에는 기본적으로 자연과학적 관점인 생물체와 환경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관심이 놓여 있다. 세계에 대한 유기체적 인식 혹은 관계적 인식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사유방식은 자본주의 사회의 해결과제로 떠오른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담론이 되었다는 점에서 환경담론이라는 용어가 지지를 받았으나, 환경이라는 용어가 갖는 인간 중심주의가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 인간과 자연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인식을 강조하는 생태라는 용어가 보편화되고 있다. 즉 자연과 자연, 인간과 자연의 상호연관성을 강조하는 생태담론은, 인간과 이성을 중심에 둔 근대적 사유방식과 자본주의와 근대민족국가체제를 중심축으로 하는 근대사회가 억압하고 간과한 부분을 비판하고 복원하려는 의지와 태도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탈근대담론의 한 양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태담론은 크게 근본생태주의와 현실생태주의¹¹⁾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근본생태주의자들은 자연의 순환시스템을 파괴한 현재의 자본주의를 궁극적인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생물중심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¹²⁾ 이들은 단순히 환경오염을

9) R. 매킨토시(1999), 『생태학의 배경』, 김지홍 역, 아르케, p. 15.

10) 생태담론의 양상에 대해서는 존 S. 드라이제크(2005), 『지구환경정치학 담론』, 정승진 역, 에코리브르에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음.

11) 이 용어는 기존 생태학 논의에서 사용되지는 않지만 일종의 현실가능한 생태주의라는 의미로 새롭게 명명하여 사용하였다.

12) 근본생태론자로 분류되는 노르웨이의 안 네스, 미국의 베이트슨, 카프라, 시나이더, 독일의 아베리 등은 현재 위기의 근본을 근대문명으로 지목하고 자연과 인간의 이원화를 실제로 인정하며 대안으로 생물

줄이자는 소극적 생태주의에 반대한다. 원인에 대한 발본적 자세를 갖고 이를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이 갖는 울림은 크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근대세계가 만들어온 삶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폐기처분해야 한다는 점과 인간을 자연과 분리시켜 이원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이 주장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즉 자본주의와 민족국가 간의 결합으로 구축된 근대체제 안에서 이들의 주장은 현실성을 갖기 어렵다는 명백한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이들 근본생태론의 입장은 현실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논외로 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생태문제를 사회문제로 보고 생태적 인식이 함장하고 있는 가능성의 최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현실생태주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들의 입장은 근대적 윤리에 대한 반성, 제도의 개선과 보완, 실천의 현실화 방안을 통해 생태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기존의 생태담론은 대체로 이 담론에 착목하고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생태적 인식에 입각하여 현실을 개선하자는 입장으로서, 개선의 방식에 대해서는 정치와 경제의 어느 쪽에 우위를 둘 것인가라는 선택의 문제에서부터 구체적인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생태주의 가운데 산업자본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근대국가체제 안에서 현실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논의로는, 자본주의와 생태학의 결합에 적극적인 생태적 근대화론, 민주주의와 생태적 결합에 적극적인 생태정치론, 자연생태학과 사회생태학의 창조적 결합인 생물지역론¹³⁾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세 가지 관점을 생태공간으로서의 동해가 갖는 현실과 결부시켜 보는 것은 생태공동체로서의 환동해 지역을 구성하는데 하나의 시금석을 마련하는 일이 될 것이다.

우선, 사회적 근대화 과정을 염두에 둔 생태적 근대화론을 살펴보자. 이 입장은 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폐기하지 않은 채 생태과피를 최소화 하려는 논의로,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이른바 녹색성장이라는 비전으로 현실화 되고 있다.¹⁴⁾ 생태적 근대화론은 결국 자본주의적 정치경제학의 생태학적 재구성 논의로 볼 수 있다. 이는 오늘날 환동해 지역 국가들이 국가 정책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현실적인 방식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 고효율을 중심으로 생태를 고려한 발전이라는 입장을 역내 국가들은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담론은 환경오염과 자연과피를 억제하는 동시에 경제적인 성장과 발전주의에 대한 일종의 면죄부로 활용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들의 주장은 현재 국제기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국제기구가 합의하고 실행하는 친환경적 정책을 국가와 지방 차원에서 수용하면서 현실화를 꾀하는 방식이 되고 있다. 문제는 생태적 근대화론이 갖는 높은 현실가능성과는 달리 경제발전 및 경제성장과 생태적 입장이

중심주의를 주장한다. 이들을 비판하며 ‘생태사회학’을 주장한 머레이 북친(Murray bookchin)은 ‘사회변혁 없이 생태문제 해결 없다’는 기치 아래 근본생태주의자들을 반인간주의적이고 생물중심주의라고 비판하며 사회변혁을 생태문제의 선결과제라고 주장하였다. 북친의 이러한 입장은 생태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주목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13) 생물지역론은 1974년 캐나다의 생물지리학자이자 시인인 알렌 반 뉴키르크(Allen Van Newkirk)가 제기한 개념으로 지역에 대한 문화적인 연구와 생명적인 연구를 결합시키는 작업으로 정의하였다. (문순홍(2006), 『생태학의 담론』, 아르케, p. 341)

14) 한국 정부는 2008년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주의를 국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

어떠한 기준과 원칙 없이 결합되면서 비판의 지점을 허용하지 않는 당위론이 되고 있다는 점이 다. 즉 이 담론은 일종의 생태지배이데올로기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생태라는 말이 전체주의나 민족주의와 결합한 예는 적지 않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독일 나치즘이 활용한 이른 바 숲의 정치는 잘 알려진 바이다.¹⁵⁾ 실천영역에서 비판과 감시를 해나갈 시민차원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환동해 지역에서 이러한 생태담론이 갖는 취약점으로, 이들의 논의가 자칫 정책미화를 위한 포장담론으로 활용될 소지가 충분하다. 특히 산업발전과 국토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국의 동북 3성, 에너지 자원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러시아의 극동지방, 토건사업에 열을 올리는 한국의 현실, 동해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개발 되었다고 인식 하에 지역발전을 담론화하고 있는 일본의 서해안이 위치해 있는 환동해 지역의 현실은 이 수준에 머물기가 쉽다. 따라서 생태적 근대화론은 이 담론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에 각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환동해 지역에서 녹색성장,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생태적 근대화 담론은 정부가 선점 내지는 독점하면서 산업자본주의가 야기한 생태문제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시민적 차원에서 산업자본주의의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를 감시할 수 있는 실천 방식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생태정치론을 살펴보자. 환경담론과 민주주의론이 결합되면서 생태친화적인 현실정치유형으로 생태민주주의론 등이 제기되는 등, 오늘날 생태정치에 대한 모색은 학계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¹⁶⁾ 이 논의의 핵심은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에서 생태적 가치가 제도 안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방식을 논의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입장만큼이나 이 이론은 복잡한 분화양상을 보이지만, 이들 논의는 생태가치와 민주주의의 제도적 결합 가능성과 결합방식에 대한 논의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오늘날 생태정치는 국제기구 차원, 국가나 지방 정부 차원, 시민 차원에서 활발하게 실행되고 있다. 이들의 실행 방식을 보면 국제기구나 국가/지방 차원에서는 주로 규제정책을 중심으로 현실화되고 있고, 대안적 모색을 시도하고 있는 시민운동 차원에서는 지역의 자발적 협력에 기반을 둔 공동체 활동을 조직하고 다양한 실천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현실화 되고 있다.¹⁷⁾ 환동해 지역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

15) 고유경(2009), “영원한 숲, 영원한 민족-나치 독일의 항속림 담론과 그 이념,” 『서양사론』, 제100호, 한국서양사학회, pp. 101-115. 참조.

16) 구도완은 생태정치라는 측면에서 국가를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였다.(구도완(2002), “녹색국가의 전망,” 최병두 외, 『녹색전망』, 도요새, p. 517)

환경정책 유형 : 지배유형	권위주의	민주주의
경제 중심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민주적 발전국가
경제-환경 조화	권위주의적 환경관리국가	민주적 환경관리국가
환경 중심	생태권위주의(파시즘) 국가	생태민주주의 국가

17) 문순홍은 이러한 자발적 결사체로 협소한 환경영역과 광의의 환경영역으로 구분하고, 전자에는 리싸이클링과 자동차 공동이용, 생태적인 음식생산, 생활협동조합 운동을 후자에는 지역화폐, 신용조합, 주택협동조합, 의료생협, 스포츠/레저 클럽, 공동육아모임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문순홍(2002), “민주주의와 환경결합 논의들의 재구성,” 최병두 외, 『녹색전망』, 도요새, p. 604)

대부분의 국가가 발전국가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이를 멈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국이다. 따라서 오늘날 환동해 지역에서 생태정치는 국제기구의 규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민운동 차원의 연대는 체제의 이질성으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지구환경정치를 효율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거시적인 지표 제시와 정확한 자료 수집, 필요한 규제의 강화는 지구환경레짐을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결국 환동해 지역의 실제적인 환경문제는 역내 생태정치를 위한 합의체를 만들어 나갈 때에야 가능할 것이다. 시민운동 차원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중국과 러시아로 인해 시민차원의 연대가 어렵고, 국가적 차원의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생태정치의 현실화는 지방정부 간의 교류 차원에서 이슈화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강한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는 국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이 지역의 생태정치는 국제기구가 선도하고 지방이 이를 지지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정책을 견제하고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녹색국가의 비전을 공유해 나가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환동해 지역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자율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생태정치는 아래로부터의 시민이 주도하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동해 지역이 폐쇄해역인 동해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물지역론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생물지역론은 근대적 시공간관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생물권을 중심에 두고 지역을 인식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생물지역은 첫째, 상호작용하는 생명 체계들의 영역이며 둘째, 정치적 사회적 정체성의 우위에 생물학적 정체성이 놓이며 셋째, 살아있는 생명체들의 공동체이며 넷째, 지역의 자연체계와 유기적 관련성을 갖는 영성의 강조로 요약된다.¹⁸⁾ 이 논의는 자연생태계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자연생태계와 사회생태계가 유기적으로 연관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는 생물을 중심에 둔 환경생태운동이자 인간의 생태적 자각을 통해 기존 생태론과 공동체론을 결합시킨 담론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무엇보다 이 논의는 지역의 생물생태의 특성에 기반을 둔 지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의사소통 과정 자체가 지역성을 결정한다는 논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담론의 논리적 약점은 지역성을 결정하는 생물을 어떤 것으로 상정하든 그것은 자연생태의 복잡성과 유기성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있다. 즉 이 논의는 요소환원주의의 한계를 그대로 안고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담론이 갖는 강점은 지역생태와 지역민의 삶의 결합을 지역성을 생산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생태공동체로서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의의를 갖는다. 국가주의, 민족주의, 산업자본주의라는 현실적 장벽들이 공동체의식을 약화시키고 있는 환동해 지역에서, 생물지역론은 생태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 데 실질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생태공간으로서의 환동해 지역은 생물다양성 보존문제뿐만 아니라 해양오염, 대기오염, 기후문제 등이 총체적으로 겹쳐지고 있기 때문에 생태지역론으로의 논리적 확장을 통해, 이 지역민들의 생태공동체의식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동해를 생태공간으로 인식하고 생태공동체로서 환동해 지역을 지역화하기 위해 이 지역에 기존 생태담론의 적용가능성과 그 현실적인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앞장에서 살펴

18) 문순홍(2006), 『생태학의 담론』, 아르케, pp. 344-345.

본 환동해 지역의 생태협력의 실상을 염두에 두고, 기존 생태담론이 이 지역에서 얼마나 적용가능하며 담론의 힘을 가질 수 있는가를 고려할 때, 환동해 지역의 생태공동체 형성은 연대의 감수성을 높이면서 민족국가와 자본의 구획선을 돌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환동해 지역의 생태공동체 형성 방안

인간을 포함한 자연은 그 자체로 복잡성을 갖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이론화하는 단계는 현재로서는 소원한 미래이다. 따라서 생태공동체 형성은 생태적 방식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현실화 방안을 제시하기는 대단히 지난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복잡한 사안일수록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이러한 담론들이 근거하고 있는 현실적 입지 혹은 담론의 위치에 대한 면밀한 포착이라 할 수 있다. 경제적 요구가 주도하며 지역화를 이끌어 온 환동해 지역의 공동체 논의는 국가주의나 민족주의에 포섭되지 않으면서 지역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모색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생태협력을 지역의 생태질서에 보다 밀착시켜 나가면서, 이를 지역민이 공유하고 내면화하여 상호 연대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모색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연대는 정서적 일체감, 의식적인 노력, 그리고 상황에 대한 수준 높은 합리적 판단까지 동시에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시키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¹⁹⁾ 특히 생태적 연대란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상호관련성을 중심에 두고 지구적 차원에서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면서 동시에 지역적 차원의 실천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생태에 대한 심층적인 인식과 통찰이 우선하지 않고는 생태적 인식과 실천을 현실적 연대로 승화시키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가 환동해 지역의 생태공동체를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식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역성을 강조하다 보면 생태적 인식의 약화 또는 결여를 초래할 수 있고, 반대로 생태적 인식을 강조하면 지역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환동해 지역의 지역성을 충분히 드러내면서 생태공동체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실적 방안이 가능할까. 여기에서는 생태공간으로서의 동해와 행위주체인 지역민으로서의 환동해인을 중심에 두고, 이들이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해륙공간의 접경성과 사회적 이질성이라는 맥락적 차이를 사유의 매개항으로 삼아 연대의 내면화와 연대의 실천을 위한 가능한 지평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이 지역의 연대를 내면화 하는 방법으로 체니(J. Cheney)가 주장한 ‘생물지역적 서사(bioregional narrative)’를²⁰⁾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동해라는 자연공간이 맺어 준 상호연관성을

19) 박호성(2009), 『공동체론』, 효형출판, p. 442.

20) J. Cheney(2002), "Postmodern environmental ethics : Ethics as bioregional narrative," *Environmental Ethics*. vol. 11. pp. 117-134.

내면화 하는 작업은, 지역의 생명체가 갖는 연관성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영역화하는 지리적 상상력의 원천으로 삶을 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태적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역내 생태질서를 발견 및 공유하고 이를 육화시켜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생태적 상상력은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다는 관계론적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애니미즘이나 토데미즘 등 인류의 원시적 사유가 갖는 보편적 사유방식이다. 다만 이것이 어떻게 환동해 지역의 생물을 통해 구체화되는가에 천착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지역생물의 한살이를 문학과 예술 등에서 적극적으로 작품화하고 이를 공유한다면 지역생태의 내면화는 가능하게 될 것이다.

지역생태의 내면화가 환동해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을 발견할 수 있는 현실가능한 방안이라며, 가라타니 고진(Karatani Kojin)이 주장하는 초국가적인 소비자로서의 노동자 간 결사체(Association)²¹⁾ 형성은 지역민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²²⁾ 동해라는 물리적 공간을 해양국토가 아니라 공유지이자 연대의 물질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생태문제에 대한 지구적 인식을 전제로, 환동해 지역의 생태 전망을 생태적 저항의 공유와 실천이라는 차원에서 제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앞서서도 언급한 국가주의, 민족주의, 산업자본주의로 귀결되지 않는 지구지역성의 실천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실천은 비록 일국에 속해 있는 노동자이라 하더라도 동시에 다국적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다양한 저항의 방식을 전개할 때 현실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 지역생물의 서사를 공유하면서 환동해 지역의 새로운 정체성 내지는 공동체의식을 형성함으로써 지역민의 심상지리를 바꿀 수 있다면, 생태적 연대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자본=국가=민족이라는 삼위일체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노동자가 곧 소비자로서 생태문제에 일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할 때만이 이러한 실천이 가능하다. 생산과 소비 두 측면에서 생태에 대한 배려와 감시를 초국가적으로 실천해 나갈 때, 이질성이 높은 현실적 장벽 앞에서 힘 있는 저항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로서의 노동자 의식에 근거한 공동체 형성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출발한 연대야말로 지속성과 성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환동해 지역의 생태공동체 형성은, 일종의 결사체적 성격을 갖는 바, 환동해라는 해륙공간의 고유성을 내면화 하면서 동시에 지구적 보편성으로서 자본주의체제와 근대국가체제에 대한 비판적 대안 모색이라는 이중과제를 동시에 직시할 때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지평이다.

21) 구도완·여형범에 따르면 매키버는 커뮤니티와 어소시에이션을 사회집단의 두 유형으로 설정하였는데 커뮤니티가 일정한 지역 안에서 전개되는 공동생활을 뜻하는 데 반하여, 어소시에이션은 그것을 기초로 하여 그 위에 개개 인간의 공동관심에 따라 인위적·계획적으로 형성되는 결합체를 뜻한다.(구도완·여형범(2010), “한국의 생태사회적 발전전략,” 이시재·구도완·오용선 외, 『생태사회적 발전의 현장과 이론』, 아르케, p. 49.)

22) 가라타니 고진(2005), 『트랜스크리티크』, 송태욱 역, 한길사, pp. 443-508. 참조.

Ⅲ. 나오며

전형적인 지중해의 하나인 동해는 폐쇄적인 해역으로 물의 순환 시스템이 유기적인 상호관련성을 가지며 연안 지역에 상호영향을 주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환경적 상호의존성이 높다는 점과 폐쇄적인 해역이라는 점에서 동해는 자체적으로 나름의 완결성을 갖는 생태공간이라 할 수 있다. 동해를 단순히 연안 지역민의 생활환경으로 인식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지역민의 삶의 터전으로서 자연과 인간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생태적 인식은, 마치 해수의 월경(越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초국가적 지역성을 지니고 있는 공간으로의 재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향후 지역의 자연공간인 동해가 지역민의 삶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는가에 주목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풍토론, 경관학, 문명론 등과 같은 지리환경에 근거한 지역연구가 아니라 인식론적 차원에서 생태공간인 환동해 지역의 지역생태와 지역민의 삶을 유기적으로 연관시키는 방안에 대한 관심을 환기한다. 이러한 근원적인 문제의식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환동해 지역의 생태적 협력은 기존의 환경운동에서 볼 수 있는 오염원을 줄이거나 억제하는 상호감시의 시스템 수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환동해 지역을 생태공간으로 재인식하는 작업은 표면적으로는 서양 중심 혹은 미국 중심의 근대적 지리인식체계 혹은 근대적 심상지리의 해체작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면에서 볼 때, 이러한 지역인식은 근대국가체제나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반성에 근거하고 있다. 지배적인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을 실천하는 지역연구는, 지역의 정보에 대한 산술적 총합이나 권력화 되어있는 현실적 필요의 재권력화를 답습하는 학문적 추인작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공간으로서 지역을 존재론적으로 발견하고 이 공간을 지역화하려는 인식론적 실천을 수행함으로써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생산적인 의미모색의 작업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환동해 지역은 여전히 매력적인 공간이자 지적 실천을 자극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고유경(2009). “영원한 숲, 영원한 민족-나치 독일의 산림정책과 숲담론.” 『서양사론』. 제100호. 한국서양사학회, pp. 101-115.
- 구도완(2002). “녹색국가의 전망.” 최병두 외. 『녹색전망』. 도요새.
- 구도완·여형범(2010). “한국의 생태사회적 발전전략.” 이시재·구도완·오용선 외. 『생태사회적 발전의 현장과 이론』. 아르케.
- 남정호(2004). “NOWPAP 해양환경보전 활동에서 우리나라의 주도적 위치 확보 필요.” 『해양수산동향』. 제 1165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2009). 『NEAR 백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 pp. 210-220.
- 문순홍(2002). “민주주의와 환경결합 논의들의 재구성.” 최병두 외. 『녹색전망』. 도요새.
- 문순홍(2006). 『생태학의 담론』. 아르케.
- 민병원(2008). “동아시아 지식질서와 문화 네트워크의 모색.” 김상배 외. 『지식질서와 동아시아』. 한울아카데미.
- 박호성(2009). 『공동체론』. 효형출판.
- 가라타니 고진(2005). 『트랜스크리티크』. 송태욱 역. 한길사.
- 富山縣 國際·日本海政策課(2008). “日本海學の提唱と歩み.” 日本海學推進機構編, 『日本海學の新世紀·8』, pp. 10-12.
- 마루카와 데쓰시(2008). 『리저널리즘』. 백지운·윤여일 역. 그린비.
- 야노 토루 편(1997). 『지역연구의 방법』. 아시아지역경제연구회 역. 전예원.
- 존 S. 드라이제크(2005). 『지구환경정치학 담론』. 정승진 역. 에코리브르.
- R. 매킨토시(1999). 『생태학의 배경』. 김지홍 역. 아르케.
- Cheney, J.(1989). “Postmodern environmental ethics : Ethics as bioregional narrative.” *Environmental Ethics*. vol. 11, pp. 117-134.

<인터넷 사이트>

2009년 제9회 NEAR 환경분과위원회 자료집 :

http://www.npec.or.jp/northeast_asia/korea2/introduction/pdf/041.pdf(2011년 2월 25일 검색)

북동아시아청소년환경보전네트워크 :

http://www.npec.or.jp/northeast_asia/youth/index.html(2011년 2월 20일 검색)

북서태평양환경보전실천계획의 홈페이지 : <http://www.nowpap.org/>(2011년 2월 18일 검색)

북동아시아환경정보광장 : http://www.npec.or.jp/northeast_asia/social/index.html(2011년 2월 19일 검색)

National and Regional Networks of Marine Protected Areas, “A Review of Progress”
[http:// www.unep-wcmc.org/resources/publications/UNEP_WCMC_bio_series/3](http://www.unep-wcmc.org/resources/publications/UNEP_WCMC_bio_series/3)
(2010년 10월 10일 검색)

Abstract

East Sea as an Ecological Space and East-Sea Rim Region as an Ecological Community

Sun-Yi, Lee*

This paper has an ultimate purpose of searching the possibility of making the East-Sea Rim Region as an Ecological Community for the regionalization of the East-Sea Rim area. Given the purpose of this paper, I focused on looking into the following three issues. At first, I critically consider the contemporary ecological cooperation and practical activities for collaborating in the East Sea Rim region. Secondly, I examine the existing theories of ecological discourses, and find that there are some problems in applying these ecological discourses to the East Sea Rim regional studies. Finally, I try to find how to internalize ecological solidarity in this region and to suggest some practical plans for the solidarity.

In conclusion, I emphasize on internaliz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East-Sea Rim area and on, in practice, containing the universal tenets of ecological community into the process of transforming the East-Sea Rim Region to a regional ecological community. In order to practice these conceptual findings in actual reality, I suggest to internalizing solidarity of the region with bioregional narratives and to conduct solidarity in actual reality by promoting workers' collaborating consciousness in terms of transnational consumers.

■ 논문접수일 : 2011년 2월 27일, 논문심사일 : 2011년 3월 25일, 게재확정일 : 2011년 4월 15일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Kyung Hee University